

흥미진진 공주

2025년 10월호



의회 소식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특별위원회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2일부터 5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8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 부서의 시정 목표와 정책이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반기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

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시민 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변함 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출범

공주시의회는 8월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덕지리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08년에도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의 반대로 이미 한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가 재개되면서 지역사회 내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서승열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을 선임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방문 등을 포함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오동진 장군 항일운동 및 기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8. 28.)



제26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8. 28.)



제2차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재개 특별위원회(8. 28.)



제26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8. 29.)



제2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9. 1.)



시민예술공간 전시단체 간담회(9. 4.)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내

일 정 : 10. 21.(화) ~ 10. 31.(금) / 11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시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회 소식

기후위기 시대, 금강 준설로 지키는 공주시민의 안전



공주시의회 의원
권경운

또다시 집중호우가 우리 공주시를 덮쳤다. 2023년 폭우 피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찾아온 재난이었기에,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했다. 비상근무 체계가 신속히 가동됐고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았다. 이웃을 먼저 챙기고 침수 피해 현장에서 힘을 보탠 시민들의 헌신도 있었다.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공주시의 누적 강수량은 375.5mm로, 2023년 589mm보다는 적었다. 하지만 강수량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우가 잦았고, 하천과 배수로의 용량을 단번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3년의 아픈 경험 이후 공주시는 주요 하천의 퇴적물 및 수목 제거, 제방 보강, 배

수장 복구 작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일부 취약지구에서는 물 흐름이 원활해져 침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피해를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단기적인 응급 복구를 넘어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천의 흐름을 되살리고, 물이 불어났을 때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만들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금강의 모래 준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인근 대전시의 사례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의 주요 침수피해 구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50만 이상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했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 낮췄다.

그 결과 올해 7월, 대전에는 나흘간 267mm의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없이 금강으로 원활히 유수가 빠져나갔다. 홍수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단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천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홍수 대응 능력이 향상된 덕분이다.

우리 공주시의 상황을 돌아보자. 금강은 오랜 세월 동안 퇴적된 모래와 자갈로 인해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물길 좁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번 큰 피해를 입은 금강교와 옥룡동 일대, 그리고 금강과 정안천, 유구천, 제민천 등 지천이 만나는 지역은 홍수

시 물이 급격히 불어나 역류와 범람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구간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수위가 단시간에 치솟아 인근 도심과 농경지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 취약지대다.

준설을 실시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첫째, 하천의 유로를 확보해 집중호우 시에도 물이 원활하게 흘러 범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하천 바닥을 낮추어 제방 높이 대비 여유 수위를 확보함으로써 제방 월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천변 경관을 개선해 시민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주시가 금강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홍수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금강 준설과 함께 제방 보강, 하천 주변 배수시설 점검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함께 병행한다면 예방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기상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언제 어떤 규모의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나중'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3년과 같은 피해를 공주시민들께서 다시는 겪지 않도록, 금강 준설을 포함한 재해예방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한 보상’이 시민 안전의 기틀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이상표

공주시는 이전부터 재난 업무의 고충을 헤아려 관련 공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 또한 크게 바뀌었다. 핵심은 작년 1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령의 취지는 단순히 기존의 수당 지급을 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국가적 요구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행안부는 “부서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산불·감염병처럼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한다면 모두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미 다수의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은 ‘자연재난 전담부서’로 건설과를, ‘재난유형별 주무부서’로 산림녹지과의 산불·산사태 업무를 명확히 포함해 수당을 지

급하고 있다.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특별시도 재난을 6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37개에 달하는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해 재난에는 부서 경계가 없음을 시스템으로 증명하고 있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이러한 원칙은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 유형별 전문인력에게 차등화된 고액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일본은 재난으로 지원팀에게 기본급의 최대 5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선진국의 공통점은 ‘부서’라는 형식이 아닌, ‘업무의 위험성과 본질’에 따라 보상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왜 중요한가?

국제노동기구의 2022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위험수당 지급은 공직자의 재난업무 몰입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며, 이는 곧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 즉, 공정한 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러한 국내의 선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제도는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됐다.

작년 수해 복구의 최일선에 있었던 건설과 직원들, 1년 내내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불과 산사태에 맞서는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의 헌신이 현재 우리 시 제도 안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공주시가 새로운 시대의 재난에 완벽히 대비하는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새로운 지침과 선진 사례를 즉시 반영해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영월군과 서울시처럼 건설과, 산림 관련 부서 등 실질적인 재난 업무를 수행하고도 누락된 모든 공직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시혜가 아닌 법령에 따른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다.

둘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급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와 영월군의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지정 사례를 본받아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모든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영웅을 빠짐없이 아우를 때, 우리 공주시민의 안전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